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 2008. 11. 6. 국회에 제출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과 2008. 12. 23. 제출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의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제1호) 중 “국가안전보장”, “국익에 중대한 영향”, “중대한 재난과 위기” 등의 용어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불명확하게 하므로 삭제하고, 보다 명확하게 직무범위를 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I. 의견표명의 배경

2008. 11. 6.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793호, 이하 ‘이철우 의원안’이라 한다)」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8. 12. 23. 다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151호, 이하 ‘송영선 의원안’이라 한다)」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철우 의원안과 송영선 의원안은 각각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의 확대는 국민의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위 법률안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II.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37조 제2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제19조

III. 판단

1. 현행 국가정보원법의 입법취지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 중 국내정보수집 대상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테러, 국제범죄조직 5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의 한정은 과거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가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과 입법자의 의지는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국회에 제출된 개정 법률안

위와 같은 현행 국가정보원법의 입법 취지를 참고하여 이철우 의원안과 송영선 의원안을 살펴본다.

(1) 이철우 의원안

이철우 의원안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이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재난과 위기 관련 정보 수집,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안전업무’로 확대하여 국가안보 현실에 맞도록 「국가정보원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철우 의원안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나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 등 일부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국가정보원에 의한 직무범위의 자의적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즉,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나 중대한 재난이나 위기 등에 대한 판단을 모두 국가정보원에 맡기고 있어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의 은밀성과 결합하여 과거와 같이 탈법적 정보 수집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위한 적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면서도,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등 인권 침해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법률안의 직무범위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송영선 의원안

송영선 의원안 제3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와 “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보안에 대한 정보”라고 규정하여 이철우 의원안보다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대해 좀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의 의미 역시 명확하지 않아서 대외정책·군사정책 및 기타 국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송영선 의원안 제3조 제1항 제1호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의 내용을 현행법의 예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활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국민의 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소결

이철우 의원안과 송영선 의원안의 주요 내용이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인권 침해를 직접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직무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 법률안에 규정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 중 “국가안전보장”, “국익에 중대한 영향”, “중대한 재난과 위기” 등 불확정 개념을 삭제하고, 변화된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서도 보다 명확하게 직무범위를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2009. 2. 19.

위 원 장 안 경 환 <불참>

위 원 장 직 무 대 행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위 정본입니다.

2009. 2. 27.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사무관 이 경 우 (인)